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여수 밤바다 불꽃놀이(전라남도 디지털사진 공모전 수상작)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11월 11일(제123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Vol. 123

2024. 11.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해야

2024년 역점과제

-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선포, 혁신적 인구정책 추진
- ▶ 미래에너지 판도를 바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 ▶ 전남 미래 100년 이글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충
- ▶ 글로벌 전남 이글 농수산물 수출산업화와 초광역 남해안 관광벨트

전남의 주요정보

- ▶ 목포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 ▶ 해남 대흥사와 산이정원
- ▶ 순천만 습지와 순천낙안읍성
- ▶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남도한바퀴’
- ▶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전라남도 우수사례

- ▶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 ▶ 영암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

의회소식

- ▶ 12대 의회 하반기 출범
- ▶ 글로벌대학 30(순천대, 목포대) 지정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기회 마련!
-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및 쌀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 ▶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 ▶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다.
- ▶ 전남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전라남도의회’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주)슈니테크 정승호 대표편

정책포커스

- ▶ 지방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방향
- ▶ 복합위기 시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무



시도지사 칼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해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해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전 도쿄대 교수이자 일본 총무청 장관을 지냈던 마쓰다 히로야는 10년 전 저서 “지방소멸”에서 ‘지방소멸’과 ‘극점 사회’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며 인구문제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하였다.

‘극점사회’란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도시의 일자리와 주거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몰려들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수도권에는 국내 인구의 51%가 집중되어 있고, GRDP(지역내총생산)의 53%와 일자리의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출생률 저하와 지방의 인구감소, 경제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지역 중 하나이다. 1970년대 331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3천 83만 명에서 작년 말 5천133만 명으로 67%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남의 노력에도 어려운 현실.. 원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한계

인구뿐만 아니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유출되었으나 서울은 72조 원, 경기도는 58조 원이 되려 역외 유입되었는데 지역민의 입장에서 허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별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지만,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권한과 예산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였다.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 해상풍력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일류 베스타스·머스크 등 풍력터빈공장 유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첨단산업 분야에 25조 3백억 원의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를 선도하는 전남을 알리기 위해 순천에 1조 원 규모의 K-디즈니를 조성하고, 지중해에 버금가는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1조 3천억 원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인이 찾게 될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농수축산업을 혁신할 ‘AI 첨단농생명 밸리’를 구축 중이며 농수산물품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장흥·해남·진도·신안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김 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등 전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전남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에는 각종 권한이 부족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원계정은 4.7조 원에서 10.2조 원으로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은 5.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재해예방 사업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투입되는 경직성 필수자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전남 재원은 2,563억 원 중 74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권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최근 풍력발전기 1기당 15MW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도지사는 3MW 이하의 허가만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김 산업도 요즘 값이 두 배나 뛰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수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김 생산이 어렵다. 이 외에도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독일 사례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은 16개 주(州) 정부 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이 주(州)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연방정부와 각 주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과 행정 과정에 참여해 주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입법, 행정, 재정권 모두 실질적인 권한 배분에 따라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광역경제 개발을 수행하고, 주 정부는 교육, 문화, 경찰업무 등 각각 고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권도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세금을 교부하는 형식이 아닌 법인세, 소득세 등을 공동 징수하여 비율에 따라 연방, 주 등에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지방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방분권형 헌법의 내용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사무 배분, 지방정부의 법률 입법권과 조례입법권 보장,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선도모델, “전라남특별자치도”

다만,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 개정에 앞서, 당면한 지방분권 방안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춰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지난 6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전남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당장 시급한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나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권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권한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첨단산업, 관광, 농어업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권한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미리 받아서 추진하고 그 성과는 전국적 적용 및 확산을 통해 다른 도와 다 같이 나눠갈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앙과 지방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은 지방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지방은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 있다.



2024년 역점과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선포, 혁신적 인구정책 추진
 미래에너지 판도를 바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전남 미래 100년 이끌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충
 글로벌 전남 이끌 농수산물식품 수출산업화와 초광역 남해안 관광벨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선포, 혁신적 인구정책 추진

전라남도는 인구 180만 명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 6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발표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6.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층(18~39세) 비율은 19.3%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1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20만 원을 내년부터 매달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동안 한 달에 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천호를 건축할 예정이며, 고흥, 보성, 진도, 신안 지역에 210호를 우선 건설한다.

다가을 이민 사회에 대비해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 건의에 앞장선 결과 법무부 제도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춰 비자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들의 정착을 도울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에너지 판도를 바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5.14GW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인 1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잠재량은 무려 444.2GW로, 전국 잠재량의 17.4%를 기록하며,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



영암, 신안, 여수 등 여러 시군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안에서는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SK E&S의 첫 대규모 단지가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 용량은 약 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수준이다.

또한, 베스타스, 머스크 등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과 3천억 원 규모에 터빈공장 설립을 결정했고, 19만 평 규모의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를 목포와 해남에 조성할 예정으로 전남이 아시아 태평양권 에너지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전남의 에너지 산업에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 법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지역 전기요금 하락이 예상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전남 지역내총생산은 5.6~19% 증가, 고용은 1만9천 명에서 6만 5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등 RE100 활성화에 따라 전남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는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미래 100년 이끌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충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들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전남도는 3개 지구 5개 시군(광양, 순천, 여수, 목포, 해남), 5개 산업, 125만 1천 평을 지정받았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의 강점을 살린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와 해남 데이터센터, 수소 산업,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전남 동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4일에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이 착공되었는데,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로 투자가 실현된 사례로 국가적으로도 큰 상징성을 가진다.

또한 올 6월에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순군이 선정되며 미래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바이오산업과 전후방산업들이 동반 성장하고, 1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나로우주센터 인근 46만 평 규모의 우주 산단 조기 조성 관련 앵커 기업들의 적기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예타 면제가 확정된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최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1,458억 원이 확정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도 예상돼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전라남도가 이끌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전남 이끌 농수산물 수출산업화와 초광역 남해안 관광벨트

세계적으로 K-푸드의 인기가 급속도로 확산된 가운데, 전남도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며 농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4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실적은 아시아, 유럽 등 주요 신흥 시장에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상담회 개최, 국제 박람회 참가,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전남 농수산물관 운영 등 노력의 결과다.

또한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을 위해 세계 일류 상품화 지원 등 품질 향상과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수출 거래의 위험 해소를 위한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수출 전 과정의 촘촘한 지원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세계적인 관광 여건과 해양자원을 가진 남해안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전남과 광주 부산, 울산, 경남까지 5개 시도가 함께 3조 규모의 “남해안 광역 남부권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데, 전남에는 10년간 전국 최다인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 특색있는 남해안 문화,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라남도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전남의 주요정보

목포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해남 대흥사와 산이정원
순천만 습지와 순천낙안읍성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목포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이자 서남단 끝에 위치한 유달산은 높이 228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기암괴석으로 이뤄져있다. 정상인 1등 바위에 올라서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다도해의 경관과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는 대학루, 달성각, 유선각, 소요정 등의 정자가 있어 쉬어가며 경치를 즐길 수도 있다. 가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기념비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도 볼거리중 하나다. 유달산 주변으로 삼학도와 근대문화거리, 갯바위, 평화광장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낭만 항구와 다도해가 조화를 이룬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비경위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목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북향 스테이션을 출발한 해상케이블카는 유달산 스테이션을 지나 바다위를 날아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고하도 스테이션에 도착한다. 총 길이 3.23km로 국내 최장이다. 왕복 40분간 다도해의 금빛낙조와 야경을 감상하며 산과 바다, 섬과 도심을 관통하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케빈을 비롯해 총 55개의 캐빈에서 발아래 유달산과 다도해 금빛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는 배를 내려다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인증샷도 남길 수 있다.



해남 대흥사와 산이정원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로 독립공원인 두륜산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사당이 자리한 표충사와 천개의 옥불이 모셔진 천불전, 조선 차의 중흥기를 만들어낸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기거했던 일지암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대흥사까지 오르는 십리숲길 또한 각양각색의 난대림이 터널을 이루고 있고, 구곡구유라 하여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대흥사는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곳으로 11월이면 매표소에서 사찰까지 1.5km 구간에 이어지는 십리숲길과 두류산 정상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손꼽히는 산행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에 위치한 산이정원에 들어서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만남에 감탄하게 된다. 52만 8,925㎡의 광활한 부지에 펼쳐진 이 정원형 식물원은 '미래와 함께하는 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성되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거닐다 보면, 다양한 식물들의 향연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산이면의 지역명을 그대로 담은 이곳은 '산이 곧 정원이 된다'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순천만 습지와 순천낙안읍성



순천만 습지는 가을철 황금빛 갈대밭과 함께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이다. 순천만 습지에서는 넓게 펼쳐진 갈대밭 사이를 거닐며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탐험해 볼 수 있다.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성곽과 마을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민속마을로 6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을철에는 노란 은행나무와 함께 초가집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전통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로 방문하기에 좋다.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전라남도 관광명소 곳곳을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전남의 가을을 담은 코스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번 가을코스는 무더위가 지나고 찾아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8개 코스로 구성됐다.

울긋 볼긋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과 민간정원, 고즈넉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사찰코스까지 남도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코스를 1만2천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며, KTX 광주승정역을 경유한다. 또한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한식의 전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미식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025. 9. 26.~10. 26.까지 한 달간 목포에서 개최된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전남이 세계적인 미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람회는 전남의 미식을 알리고 미래 먹거리를 공유하는 [미식존]을 통해 ▲남도전통 미식관, ▲세계 미식관, ▲세계의 식문화관,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미식관(환경문제와 식품고갈 대체식품) 등을 운영하여 전남과 세계 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미식 관련 1~3차 산업을 연계하는 [산업존], 세계 대표요리 쿠킹클래스, 나라별 음식관련 전통과 미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전라남도 우수사례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영암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성전 공사 전

성전 공사 후

전남 강진군이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직접 빈집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 원, 7년 임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하며,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진군은 2022년 7월부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381동의 빈집을 파악했고 빈집의 상태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을 나누어 상·중 등급 210여 가구는 리모델링, 하 등급 171가구는 빈집 철거를 진행해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

영암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8,794건 총 1,236백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모금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루어진 것이다.

영암군은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 ‘영암군’, ‘산후조리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관련 키워드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 영암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고향사랑e음 4,961건 840백만원, 민간정보시스템 3,897건 390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영암군은 공적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진행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대불산단 탄소 배출 0g 프로젝트’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영당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과 △엄니 영암 극장 운영,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제 도입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영암군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색적인 답례품을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천하장사와의 식사 데이트권, △F1 레이서와의 서킷 체험권 등은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해 답례품 발굴과 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에 관심이 적었던 단순 교류인구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관계인구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주민구로 전환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의회소식

12대 의회 하반기 출범

글로벌대학 30(순천대, 목포대) 지정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기회 마련!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및 쌀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다.

전남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전라남도의회’



12대 의회 하반기 출범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지난 6월 27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균 의장(광양)과 이광일 부의장(여수), 이철 부의장(완도)을 각각 선출했다. 또 상임위원장은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목포),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여수),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장흥),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나주),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신안), 김정희 교육위원장(순천)을 각각 선출해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글로벌대학 30(순천대, 목포대) 지정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기회 마련!

글로벌대학 30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서 정부가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글로벌대학 30 지정이 지역대학과 더불어 지자체, 지역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 방지 등 지방소멸을 막는 선순환체계 조성의 시작점이라 판단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3년 국립순천대학교에 이어 올해 국립목포대학교가 글로벌대학 30에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순천대는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지역 주요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대학으로, 목포대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해상풍력 중심의 그린해양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및 쌀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월 1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산지 쌀값은 17만 5천 원/80kg(‘24.9.5.기준)으로 작년 동기 19만 9천 원/80kg 대비 12.1%, 최근 5년 평균가 19만 1천 원/80kg 대비 8.2% 낮은 가격이지만 쌀값의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없어 농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가 재고쌀 28만톤(조곡 39만톤)을 포함한 과잉량 전부를 시장 격리하고 수확기 쌀 가격 23만 원/80kg 이상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캠페인도 전개했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용)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순천·강진의료원과 여수시보건소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순천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여수시보건소를 찾아 공중보건 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과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대책도 살피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다.

전라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추석 또한 사회복지시설 115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원과 직원 70명이 매실농가를 방문해 매실 수확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남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전라남도의회’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연구모임 등을 통해 민생회복 등을 위한 조례 제·개정 544건, 결의문 183건 등 99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년특구를 지정하여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우주항공, AI, 수소,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제정해 전남의 신성장산업 기반을 다졌다. 전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향상 등 복리증진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이끌어냈고,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의 토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전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간 정책 TF를 구성하여 현실성 높은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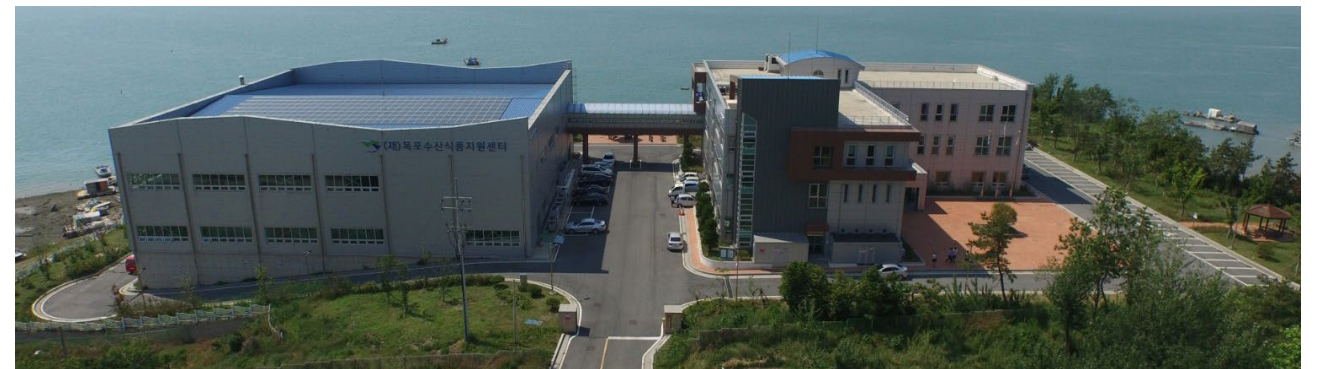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주)슈니테크 정승호 대표편
박소정(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해석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 특히‘김’과 관련된 ‘김 종자용 친환경 배양 필름’을 개발한 (주)슈니테크 정승호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주)슈니테크 간단한 기업 소개



요새 김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작년에 김 가격도 한 2~3배 정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김의 씨앗인 김 종자가 굴 껍데기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굴 껍데기를 해마다 약 3천 톤씩 수입해서 육상에서 김 종자를 배양합니다. 먼저 굴 껍데기를 바닥에 촘촘하게 나열한 후 물을 발목 높이만큼 채웁니다. 그다음에 김 종자를 고르게 뿌려서 굴 껍데기 안에 김 종자를 잠입시켜 6개월간 적절한 조도와 온도를 주어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김 종자를 패각사상체라고 하는데 이 패각사상체를 김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럼 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다 긴 그물에다가 균일하게 매단 후 바다에 펼쳐 놓는 채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채묘를 통해 김 종자가 튀어나오면서 김 그물에 붙게 되고 우리가 먹는 김이 그때부터 김 그물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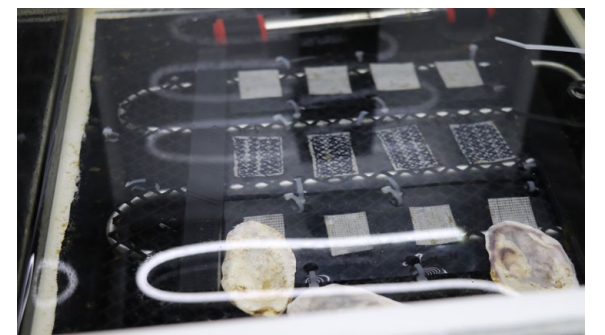
그런데 패각사상체를 약 3일에 걸쳐 사용하고 나면 굴 껍데기들은 그대로 해양쓰레기가 되는 거죠. 해마다 그렇게 수 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채묘에 사용된 기자재들은 소각을 하는데 때로는 해변가에 방치하기도 해서 바다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 껍데기를 전혀 쓰지 않고 친환경 기자재로 대체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연구 끝에 ‘김 종자용 친환경 배양필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환경 배양 필름을 개발해서 굴 껍데기를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전에 LG전자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수산물 중에 ‘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LG전자 VS사업부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고요.

그런데 김 종자 양식을 45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셔서 “김 종자 사업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못 할 것 같으니 네가 와서 한번 해 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스마트팜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가진 IT 지식과 아버지의 김



종자 양식 노하우와 인프라를 결합해서 스마트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아내를 1년간 설득해서 두 아이와 같이 온 식구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 일을 한 3년 정도 배웠고요, 3년 간 이 굴 껍데기랑 싸우다 보니까 굴 껍데기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종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회사를 전라남도 목포에 설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은 전라남도에서 80% 이상이 생산됩니다. 특히 김 종자 배양장, 김 양식장, 그리고 가공 공장까지 김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이 다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어요. 그중에서 목포가 김 산업의 중심이자 유망 도시라 할 만 합니다. 목포 대양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 쪽에 김 가공 공장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제1호 김 전문기관이 목포시 연산동에 위치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 센터를 통해서 저희의 비전을 펼치는데 최적이라 생각하고 목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며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전남해양수산물투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제품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지원이 초기 기업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여러 좋은 투자자분들과 멘토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됐고 또 좋은 선·후배 기업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특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투자를 해주셨어요. 올해 직접투자 1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펀드 뿐만 아니라 킹슬리벤처스, 그리고 MYSC와 같은 훌륭한 엑셀러레이터를 만나게 되어 추가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템의 사업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올해 안에 후속 투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모두 마치고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남도의 장점은 무엇이나요?

‘전라남도’하면 천혜의 환경이죠. 좋은 갯벌도 많다 보니 다양한 수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육류도 많이 먹지만, 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인데 그 많은 수산물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전라남도에서 주요 생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산업을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환경이지만 테크 기반의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인력풀이 너무 좁습니다. 모두가 서울로, 경기도로, 대도시로 모여들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먹거리 산업과 첨단 산업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힘이 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쏟았던 부분들을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하얀 도화지와 같이 무엇이든 그려 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스타트업을 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셨고 그중 인력을 구하는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대표님만의 인력을 구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저희는 실질적인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9시 반에서 5시 반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덜 일하는 거죠. 거기에 매주 수요일은 패밀리데이여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워라벨의 만족감을 주고 회사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Win-Win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사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다른 지역에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모셔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를 통한 우수 인재 모집도 좋지만 채용 기준에 관한 일관된 철학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실력이 뛰어나거나 전공이 딱 맞는 분들이라도 대표나 운영진과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성과 자세가 부족하다면 불통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치관의 공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일은 얼마든지 배우면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대하다 보면 좀 편안하게 대하게 되는데 상하 일방적인 편안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부당한 일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상호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90%를 예측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슈니테크만의 경쟁력 및 차별점은?

저희는 필름으로 기존의 굴패각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를 기존에는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통영 같은 곳에 굴패각이 너무도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굴패각을 재활용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굴패각을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타일처럼 찍어내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꾸준히 돈을 투자해 가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험 삼아 시도를 해봤기 때문이죠. 굴패각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저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쓰지 말자는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김 종자 배양에 대한 기술과 필름제조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저희는 45년간 김 종자 배양을 해오신 전문가를 바로 옆에 두고 있고 5년 간의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며 수 십년의 경험을 가진 고분자 소재 전문가 교수님을 채용했고 대기업과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종자 배양용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연구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최초로 진입해서 빠르게 패각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제가 김종자생산자연합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상위 협회인 김산업연합회에서 필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니즈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필름의 개발만 완료되면 내년부터 선판매에 들어가 2028년 경이면 시장점유율 90%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SAC 필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SAC는 Seed Artificial Culture의 약자로 친환경 종자인공배양 필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필름은 굴 패각의 구조를 그대로 모사를 해요. 굴 패각은 각주층, 진주층, 석회층 이렇게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김 종자는 최상위에 있는 각주층을 뚫고 들어가 각주층과 진주층 사이, 그리고 진주층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저희 필름은 그 구조를 따라 친수성 보호층, 종자 배양층, 그리고 제일 아래에 베이스층 이렇게 총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 제조 및 배양 방법으로 올해 초 국내 특허 등록, 그리고 PCT 해외 출원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중국이랑 일본의 개별 국제특허, 그리고 보완 특허까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SAC필름을 개발 완료하고 실증화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추후 친환경 SAC필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제품 제작을 우선 완료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소형 크기의 스마트 배양 장치를 9기를 만들어놨는데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필름들에서 김 종자가 배양되고 있습니다. 수심 종의 테스트시료를 통해 약 3달 정도면 필름에서의 배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말까지 시제품 제작 단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김 종자는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배양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사전 섭외된 배양장들에 시제품을 설치하여 직접 필드에서 배양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9월에 충분히 배양된 김 종자 배양 필름을 그대로 바다에 가져가서 실제 김 양식까지 해보는 거죠.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지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이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먹던 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분 분석도 해볼 계획이고요, 필드테스트가 진행 중인 20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해서 2026년도부터 어가에 필름을 공급 할 예정입니다.

슈니테크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김 산업에는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 원초 생산 어가, 마름김 가공업체, 스낵김 가공업체 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인 김 종자 배양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종자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슈니테크는 김 산업의 뿌리인 김 종자 산업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굴 패각으로 인한 김 산업 내의 분쟁, 품질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종자를 깨끗하게 생산해 내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필름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이 김 산업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필름은 스마트팜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김과 종자를 양식하고 있는 현실을, 필름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고품질 김의 대량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의 영업활동이 단순히 하나의 회사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슈니테크의 최종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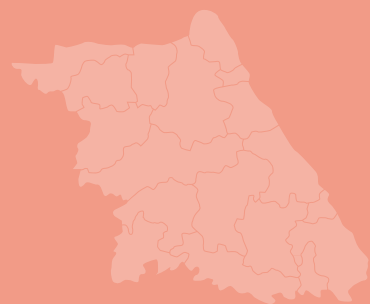
회사이름을 슈니테크로 지은 이유가 있는지?

제 이름이 정승호 SH구요. 저희 연구소장님 이름이 김훈입니다. SH와 Huny, 둘을 합쳐서 슈니가 됐고요, 각자 가진 역량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회사를 키워보자는 단순한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단순한 회사 이름을 꼽으라면 애플이 있죠. 그냥 사과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단순하죠. 단순한 이름과 달리 IT산업의 한 획을 그은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 단순한 이름으로 김 산업계의 애플처럼 되어 김 산업에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자분들께

김은 우리 밥상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대표 반찬입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나 방사능 오염수 등으로 바다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먹고 하면 정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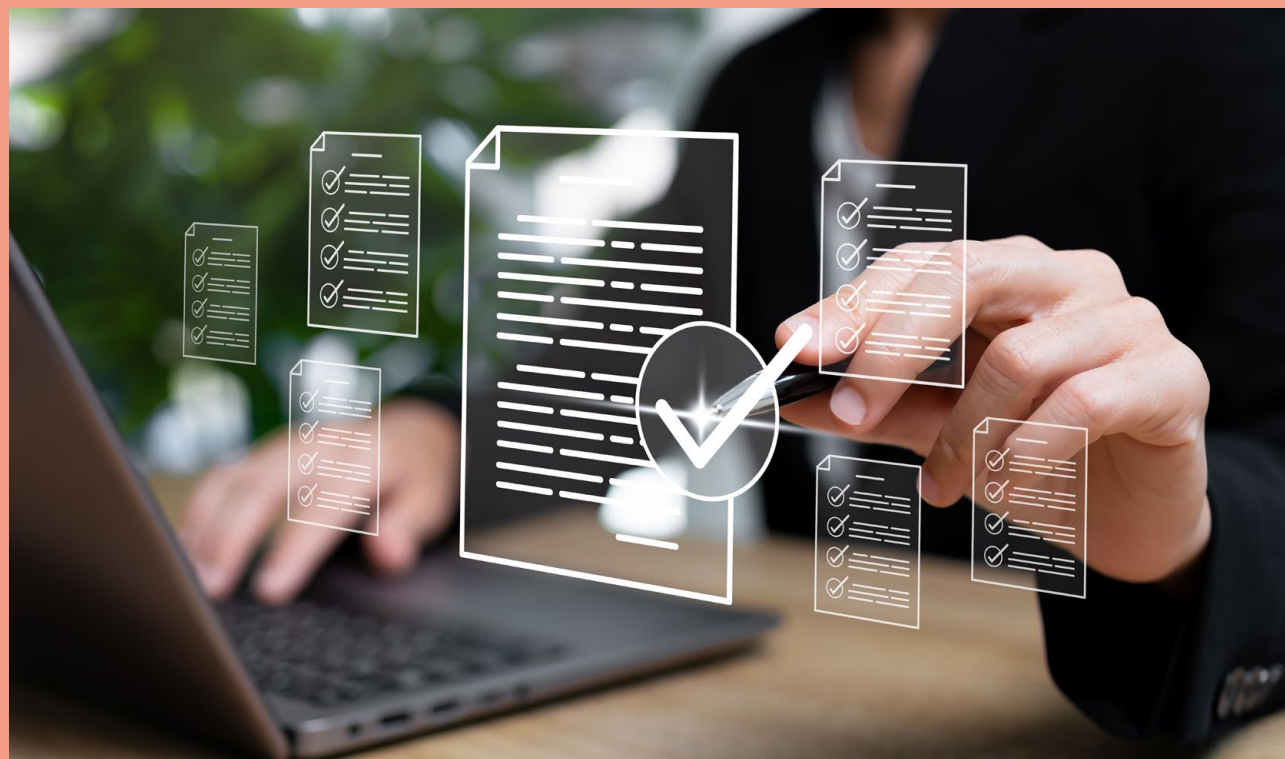


정책포커스

지방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방향

복합위기 시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무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방향



조정찬
입법 Q&A 대표, 전 법제처 국장

문제의 제기 : 법령 제·개정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필요성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3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부처는 법령과 재정을 통하여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중앙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중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자치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가 거론되었고, 그 결과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법령안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통보하여 반영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나름대로 강력히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이후 2021년 6월, 2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3,266건의 법령안이 검토되었고, 이 중 131건은 자치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현재 사전협의 대상이 사무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이른바 중앙부처의 실속없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무 지방이양에 제동을 걸고, 이양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조달에도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전협의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조차도 중앙부처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자치단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령을 입법할 때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제25조),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제26조),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 관리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였다(제27조의2).

또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에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대회 등의 무분별한 유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사전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 법령이나 예산이 자치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거나 미리 막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도조차도 중앙의 주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래설이라는 희한한 주장이 확고한 다수설인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사전영향분석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200개가 훨씬 넘는 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정착단계에 들어선 지방 4대 협의체가 있기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다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일종의 사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입법평가라는 용어에 대하여 입법권의 핵심인 국회에서는 매우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자인 자신들의 입법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요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현재 여러 법률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적 입법평가에 대하여 국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입법절차로 규정한 의무적 사전평가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각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법률의 경우에는 정부 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만 이러한 평가제도가 적용되고, 의원 제안 법률안은 「국회법」에서 아무런 장치가 없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 열거된 항목에는 빠져 있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은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는 규제영향분석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와 함께 입법절차를 지연시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입법예고는 매우 민주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의제에 반기를 드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규제영향평가와 함께 입법기간을 늘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지방영향분석제도 도입의 논의 동향

제21대 국회에서는 의미있는 입법이 시도되었다. 먼저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방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기본법적 법률안, 다수 부처 협의 필요 법률안, 한시적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개의 법률안 중 전자는 수많은 소위 심의를 거치면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누락되었고, 후자는 소위 심의를 거친 후 방치상태로 있다가 2개 법률안 모두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영향평가 내지 입법영향분석 기피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률안의 완성도 역시 문제가 있어 입법을 시도했다는 자체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맺는 말 : 지방영향분석제 도입에 있어 핵심적 고려 사항

자치분권에 초점을 맞춘 입법영향분석제도 설계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상 법률안의 범위이다. 대상 법률안을 제정법률안 등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분권에 관한 법률안에 국한시킬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현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상 사무의 범위이다. 자치분권에 관한 법률안에 한하여 적용하더라도 자치사무 관련 법률안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치분권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방재정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률안 발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제안 법률안을 포함시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여러 법률에 규정된 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법에서는 의원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만

신설조문을 적용해도 된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정부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영향분석 실시기관이다. 입법영향분석 실시기관을 국회 입법조사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영향분석제도의 대상이 의원제안 법률안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과 분석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조사처가 담당함이 타당하다. 다만, 지방 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참여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실무적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의제이다. 입법영향분석 항목을 법에서 대강이라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사항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반영해야 할 핵심은 영향분석 대상과 분석의 중점 사항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영향분석의 대상	영향분석의 중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 · 변경 · 폐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제도의 변경 또는 수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의 신설 · 변경 ·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의 준수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의 재배분 · 조달방안 및 인력의 확보방안과 방안의 타당성 ○ 국가사무로 배분된 사무의 집행방법으로서 기관위임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필요성 ○ 변경 또는 수정된 지방재정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입을 영향 및 대책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 · 감독방법이 자치분권을 저해하는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경비의 조달방안과 타당성 ○ 그 밖에 자치분권을 보장하는데 저해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특히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영향분석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성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영향분석을 담당하고 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인 시 · 도지사 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영향분석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황동일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회협력국장

복합위기 시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무

지난 20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가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같은 것이었다면, 팬데믹과 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가 동시다발하고 있는 21세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수호하는 보건 의료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의료 역량은 의학·의술·의료,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의학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의술을 진보시키며,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과 의술 연구, 진료 서비스의 최전선에 국립대병원이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공공기관이다. 동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동법 제8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설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바, “1. 의학계 학생의 임상 교육 2. 전공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및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 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 의료사업 7.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총 7가지의 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

앞의 1~4항목까지가 ‘교육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기본적 책무라면 5~7번까지는 ‘임상병원’으로서 실제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과 비중은 2024년 현재 전국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중 과반이 훌쩍 넘는 10개소가 국립대학병원들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 또한 근미래 보건 의료 위협에 대응할 핵심 보건 의료정책으로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근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 ‘팬데믹(pandemic, 전염병과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고,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연말에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2024년 4월까지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및 그로 인한 직간접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이은 ‘넥스트 팬데믹’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보건 의료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건강한 미래를 가름하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막연히 미래에 닥쳐올 위협이라고 생각하던 ‘기후 변화’ 문제가 당장의 ‘기후 위기’로 발현되고 있다. 과학적 기후 관측이 시작된 이래 폭염·폭설·폭우·가뭄·홍수·태풍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고’, ‘최악’의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기후 위기가 중요한 보건 의료 의제인 것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내내 슈퍼 태풍과 각종 이상기후 현상으로 역대 최악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날로 격심해져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건 의료 안전망 구축이 또 다른 미래 보건 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출생·고령화’ 및 이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구감소 수준을 넘어 ‘지역 소멸’, 나아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컨대 서울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강원도 평창군의 총인구가 2023년 기준 3만 9천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3,539명으로 전체 인구의 34.9%에 달하고 있다. 면적의

크기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적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힘들 뿐 아니라, 특히 의료 서비스가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자 인구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수요는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수요는 거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 원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 평창군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 27일 정부는 감염병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초고령 시대 지역 필수 의료의 차질 없는 공급과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각각 1개, 1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광역 시도를 책임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17개소, 시군 단위를 커버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55개소가 되었다. 17개소의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 10개소가 국립대학병원들이다. 지역 필수·공공 의료 서비스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여야 할 보건 의료 개혁 의제가 필요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끝모를 갈등과 대치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면서 ‘세계 최고’를 구가하던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전달체계 및 서비스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 및 이에 반발하여 시작된 전공의 사직 사태, 그리고 전공의 현장 이탈에 따른 병원의 진료량 급감으로 인하여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24년도 연말 기준 추정 적자액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적·경영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의대 신입생의 대규모 증원 및 재학생의 대거 휴학·유급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 현직 전공의의 이탈 및 근미래 전공의 지원자 수 감소 →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인력 부족 심화 → 특히 지역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연쇄 반응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미래 보건 의료의 경쟁력이 고갈되어 버릴 수도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넥스트 팬데믹과 기후 위기, 고령화가 동시에 밀려드는 절체절명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의학계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미래 질병에 대한 연구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의무를 별도 법률에 의거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의무로 강제한 것 또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동체 전체의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 보장’은 근대 국민국가 이래 전세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이자 정당성의 원천이다. 하물며 팬데믹과 기후 위기, 고령화라는 ‘메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21세기 복합 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은 모든 국가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의 20세기가 ‘산업화’와 이에 기반한 ‘성장·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안전’과 ‘지속가능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방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저출생 초고령화라는 이중의 쓰나미 앞에서 시민과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수호해 내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 원년을 앞두고, 보건 의료가 많은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 의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호는 '전라남도'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김영록 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선포, 혁신적인 인구정책 추진, 「미래에너지 판도를 바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전남 미래 100년 이끌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충」, 「글로벌 전남 이끌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와 초광역 남해안 관광벨트」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전라남도 우수사례』에서는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영암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12대 의회 후반기 출범」, 「글로벌대학 30(순천대, 목포대)지정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기회 마련」,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및 쌀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다」, 「전남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전라남도 의회」를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해석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 특히 '김' 과 관련된 '김 종자용 친환경 배양 필름'을 개발한 슈니테크(주) 정승호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지방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방향"과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 정립과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12월호는 '광주광역시'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